

410회 국회(정기회)
국 정 감 사

업 무 현 황

2023. 10. 11.

금 융 위 원 회

제 4 1 0 호
부속(부속)
(부속)

부

마

부

부

2023. 10. 11

부

부

부

부

부

목 차

I. 2023년도 예산집행사항	1
II. 202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5
III.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
IV.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5
V.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5
VI. 기타 사항	89
[별첨]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97

I. 2023년도 예산집행사항

□ 2023년 예산 집행현황('23.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	지출
1. 인건비	31,853	21,378
2. 기본경비	8,414	5,107
3. 사업경비	1,563,352	990,845
[301] 핀테크 지원 사업	13,950	11,004
[303] 자금세탁방지추진	804	618
[304]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2,220	0
[501]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4,641	2,797
[301]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029	862
[306]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1,830	1,485
[301] 금융소비자보호	101	59
[304]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38	17
[880]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360,168	168
[88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28,000	28,000
[88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67,801	367,727
[30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886	886
[318]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300,000	100,000
[302]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378	189
[303]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280,000	280,000
[30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66,800	166,800
[501]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858	743
[502]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사업(정보화)	1,744	922
[504]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574	91
[505]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화)	117	74
[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81	91
[302] 정책연구개발	700	257
[303] 금융정책알리기	879	426
[307] 국제중재수행	640	62
[309]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07	215
[315] 회계의날	68	2
[317] 금융의 날 행사	80	6
[318] 소송 수행 비용	425	311
[88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27,033	27,033
4. 내부거래(전출금)	2,160,000	302,20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60,000	302,200
합 계	3,763,619	1,319,530

Ⅱ. 202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추진실적

목 차

I.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9
1. 가계부채 대응 강화	9
2. 부동산 PF 관리	10
3.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및 기업부실 확대 방지	11
II.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13
1. 新성장산업 지원 강화	13
2.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14
3. 가계취약차주 지원	15
III.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16
1. 금융산업 혁신	16
2. 자본시장 선진화	17
3.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18
IV.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19
1.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19
2.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20
3.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21
4. 금융소비자 신뢰 및 편익 제고	22

I.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1 가계부채 대응 강화

추진 배경

- 금리인상, DSR 안착 등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는 금년 들어 부동산 거래 회복 등에 따라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BIS기준, %) : ('16)87.3 → ('21)105.4 → ('23.1Q)101.5

** 가계대출 증가추이 : ('23.1)△8.1 (2)△5.1 (3)△5.1 (4)+0.2 (5)+2.8 (6)+3.5 (7)+5.3 (8)+6.2

➡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대응 현황

-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최근의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양적·질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노력을 지속 추진중

①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견지

* 50년만기 대출 등이 DSR 우회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등

② 정책모기지(특례보증자리론 등) 공급속도 조절

* 금리 인상(8·9월) 및 일반형 특례보증자리론 공급 중단(9.27일) 등

③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적극 추진

*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 마련,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향후 대응방향

-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2

부동산 PF 관리

추진 배경

- '22년 하반기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으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시장 불안심리는 상당 부분 완화
 - 다만, 고금리상황 지속, 공사원가·안전비용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선제적 대응 필요

대응 현황

- 금감원과 함께 PF사업장 대상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PF의 단계적이고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 중
 - '22.10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발표, PF사업장 정상화·연착륙 유도

- 채안펀드 재가동(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PF-ABCP 유동성 지원 확대(8→16조원), 주금공·HUG 사업자보증 제공(10조원) 등

- '23.4월,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는 추가조치 시행

* 총 187개 사업장 적용, 152개에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진행 중('23.8월)

- 금년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상사업장 금융공급,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20조원 이상 지원 확대

- 정상사업장 금융공급을 위해 주금공·HUG 사업자보증 10조원 추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건설사 지원 3조원 확대

- 사업장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PF사업정상화 펀드」를 공공·민간이 함께 2조원 (캠코-민간 1.1조원, 금융업권 자체 0.92조원) 규모로 조성

* 캠코-민간 매칭 펀드 1.1조원, 금융업권 자체 별도펀드 0.9조원 등

- 非아파트 사업장 대상 건설공제조합 대출보증 신설(6조원)

향후 대응방향

-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

3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및 기업부실 확대 방지

추진 배경

- '22년부터 금리인상,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및 기업부실 확대 우려
-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증가

<표> 금융권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추이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20년	'21년	'22년	'23.2Q	'20년	'21년	'22년	'23.2Q
은행	0.28	0.21	0.25	0.35	0.64	0.50	0.40	0.41
보험	0.17	0.13	0.22	0.30	0.15	0.13	0.23	0.43
저축은행	3.25	2.51	3.41	5.34	4.20	3.40	4.08	5.61
상호금융	1.54	1.17	1.52	2.80	2.02	1.61	1.84	2.91
신용카드	1.29	1.09	1.21	1.58	1.01	0.82	0.85	1.08
캐피탈	1.26	0.86	1.25	1.78	1.70	1.30	1.50	2.10

- 기업부채비율 상승, 이자보상배율 하락 등 기업 재무여건 악화
- * 기업부채비율(한은 금융안정상황) : ('21) 80.6% → ('22) 82.9% (+2.3%p 증가)
- 이자보상배율(한은 금융안정상황) : ('21) 8.7배 → ('22) 5.1배

대응 현황

- 금융업권별 건전성 강화 등 선제적 조치로 대응여력 확충

① 은행권 자본, 충당금 등 건전성 제도 정비

- * i)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23.5월) ii)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23.9월부터 시범운영)
- iii)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10월중 감독규정 개정)

② 다중채무자(저축은행) 및 부동산·건설업 등 위험업종(상호금융)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 *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 완료('23.9월), 시행 예정('24.7월)
- (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 예고('23.5월),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중

③ 매월 부동산PF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사업장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충당금 추가적립,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조기상각 등 유도

□ 상시 기업모니터링 운영 및 부실기업 정상화 지원 등

- ① 기업 부실위험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실시중

* (예) 건설업 평가시 평가시점의 평균분양률, 사업장위험 등 특화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 ②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23~’27년 4조원), 캠프의 부실기업 정상화 지원프로그램 확대**

* ‘23년 1조원 조성 추진중 (정책금융기관 5,000억원, 민간자금 5,000억원)

** 자산매입 후 재임대(Sale&LeaseBack), 워크아웃 회생기업 신규자금 지원(DIP 금융) 등

- ③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정상기업에 대해 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대상 확대*

* (기존) 신용공여액 10억 이상 기업만 지원 → (개선) 신용공여 10억 미만 기업도 지원

향후 대응방향

□ 전 금융권 건전성 확보 노력 지속 추진

- ① 전 업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 유도

-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관리 지도

- ② 채무조정, 연체채권 상·매각/유동화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 i)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새출발기금 등에 금융회사 적극 참여 유도

ii) 캠프뿐만 아니라 민간회사까지 연체채권 매각기관 확대

iii)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범위 확대에 따른 유동화 촉진(시행령 개정중)

□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계 정비 및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 지속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23.10.15일 일몰) 연장 또는 재입법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안정적으로 지원

- ② 신규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투자개시 하는 등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 도모

Ⅱ. 실물 ·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

1 新성장산업 지원 강화

추진 배경

-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

*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OECD) : ('07~'20) 2.8% → ('20~'30^E) 1.9% → ('30~'60^F) 0.8%

- 성장률 제고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대한 금융 공급이 필수

대응 현황

-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합동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23년중 정책금융 91조원 집중공급 추진

* ①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②미래유망산업 육성 ③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 · 중소 · 중견기업 육성 ⑤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 新수출 판로 개척 및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23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23.8월) 마련

- 혁신성장펀드 조성('23~'27년 5년간 총 15조원)을 통해 국가전략 산업 분야와 성장단계 중소·중견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

- 벤처기업 지원방안('23.4월)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지원(10.5조원)하고 규제개선*으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은행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확대(자기자본 0.5% → 1.0%) 등

향후 대응방향

-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및 혁신성장펀드의 차질없는 조성·투자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창출 지원

2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추진 배경

- ☐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대응 현황

- ☐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 지난해 旣마련된 연착륙 방안*('22.9월)에 따라 만기연장 등을 차질없이 지속 지원
 - * (만기연장) '25.9월까지 만기연장 지속, (상환유예) 차주와 금융회사간 협의하에 수립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 지원
-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속
 - '23.8말 기준 약 2.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약 1.39조원 규모)에 대하여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중
 - * 평균 감면율 : (매입형) 원금 70% 감면, (중개형) 금리 4.5%p 인하
- ☐ 저금리 대환 지원
 -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7% 이상)을 저금리(최대 5.5%)로 대환하고, 사업용도로 사용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8.31일)

향후 대응방향

-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을 차질없이 지속
-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 저금리 대환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3

가계취약차주 지원

추진 배경

- ☐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

대응 현황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여 공급 예정

* [근로자햇살론] 2.6조원→3.2조원(6천억원 ↑), [햇살론유스] 2천억원→3천억원(1천억원 ↑) 등

☐ 소액생계비대출 시행

-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체자, 무소득자까지 포함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출시('23.3월)로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 보완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실적('23.3.27.~9.15.) : 100,364명, 606.5억원(1인당 평균 60만원)

☐ 청년도약계좌 출시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월 납입한도 70만원, 5년만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3~6%(개인소득별 차등)

향후 대응방향

- ☐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지속 보강해 나갈 계획

- ☐ 청년도약계좌 가입접수(매월) 및 안정적 운영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속 지원

Ⅲ.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1

금융산업 혁신

추진 배경

- 디지털 전환, AI 등 새로운 기술 발달 등으로 금융·비금융간 융합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혁신지원 필요

대응 현황

- 금융보안 규율체계 개편*('목표·원칙 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금융보안규제의 국제 정합성 및 혁신 친화성 제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지나치게 세부적 규율사항은 삭제 또는 하위규정으로 전환(4분기)

-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은행업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발표('23.2월~7월)

* [주요 발표과제] ❶은행권 신규플레이어 진입 촉진 ❷금융권 업무위탁제도 개선 ❸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❹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❺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 ❻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❼은행 경영공시 및 사회공헌 활성화 등

- 핀테크 산업을 금융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 강화, 창업·성장·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정보제공 등 지원체계 마련

* ❶「핀테크 혁신펀드」 추가조성('20~'27년, 총 1조원), 정책금융지원 강화(연간 2,000억) ❷ 창업·성장 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회계·기술 전문분야 컨설팅 제공 ❸ 해외진출 거점지원, 현지 정보제공(규제·산업동향 등), 해외인력 pool 확보 등

향후 대응방향

- 전자금융 분야 자율보안·사후책임 원칙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24년)
- 은행업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관련 既발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24년)
-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 토대로 금융회사 협업, 해외진출 등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도 병행('24년)

2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배경

-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실물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

대응 현황

- (투자자 신뢰 회복) 일반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물적분할 후 상장과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시행*
* 상장심사 강화('22.9월), 공시강화('22.10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22.12월)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M&A시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등 일반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 자본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23.6월~) / ** 자본법 개정안 발의('23.5월)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공매도 제도 보완('22.10월 시행), CFD 제도개선('23.9월 시행) 등 거래질서 확립 노력 지속
- (자본시장 역할 강화)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외국인 ID 폐지('23.12월 시행),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24.1월 시행), 배당절차 개선('23.1월 시행) 등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접근성 제고
 - 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수용,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신설 등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23.7월 전자증권법·자본법 개정안 발의)
 - BDC 도입 추진(자본법 개정안 정무위 계류중('22.5월)),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주관사 책임 강화 등('23.7월 발표, '24년 시행)

향후 대응방향

- 既 발표된 과제별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3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추진 배경

- 국내의 저성장,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 외연 확대가 필수적
- ⇒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기관의 해외 진출 및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추진

대응 현황

- 금융회사의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7.17, 8차 규제혁신회의)
 - *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범위 개선, 해외진출 초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추가부여 등
- 금융회사의 현지 영업 및 규제현황 공유,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주요국 현지 외교공관 등 활용한 '금융진출 협의체' 구성
 - * 주요국(인니·베트남·캄보디아)에 공관·현지 금융회사 등이 참석하는 '금융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현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내 금융사의 현지 영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 * 금융위원장 일본(10.2~10.4) 방문 예정, 부위원장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5.16~5.20), 동남아(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 9.3~9.9) 등 방문

향후 대응방향

- 금융 공공기관들의 해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외 금융협력협의회 역할강화 및 금융분야 ODA활용 확대방안* 마련
 - *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사업을 발굴하여 KOICA의 무상ODA 예산을 활용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모색
-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금융외교 활동도 지속 추진

IV.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1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추진 배경

- ☐ 現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16년~)
- ☐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개별 직원의 일탈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 빈번
 - * 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 대규모 횡령 등
 - 근본적으로 현행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한계 존재

대응 현황

- ☐ 금융위·금감원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 →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23.6월)」 발표
 - ① 모든 임원은 소관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사전에 책무를 명확히 배분하고,
 - ②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고 제대로 준수·작동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도 부여
 - ③ 이사회 본연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강화

향후 대응방향

- ☐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2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추진 배경

-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필요

대응 현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24.7.19일 시행)
 - 국회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법률 제정(7.18일)
 -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가상자산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 법 시행을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구체적 보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안 검토 중
 - 이해상충 해소방안,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등 규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중(정무위 부대의견)

향후 대응방향

- 시행령, 감독규정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차질없는 법 시행 준비
- 상장(거래지원)·공시 규제 등에 대한 글로벌 동향 모니터링,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

3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추진 배경

- 다양한 유형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어 이에 **엄정 대응**할 필요

대응 현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24.1월 시행 예정)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제한 및 자본시장 거래 제한(최대 10년) 관련 자본시장법 입법 지원(‘23.5월, 관련 의원안 발의)
 -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23.9.21.) 발표
 -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법무부·검찰 등 기관간 협업 및 정보공유 강화, 포상금 한도 상향,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자산동결도입 추진 등
-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23.5월 공포)
- (유사투자자문업) 주식리딩방 등 신종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지원
 - *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23.6.27.)
- (보험사기)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한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마련(‘23.7월),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등 입법* 지원
 -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처벌 등)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23.7.4.)

향후 대응방향

-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추어 「자본시장법」(‘24.1.19.), 「통신사기피해환급법」(‘23.11.17.) 하위법령 정비
-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보험사기 알선·권유금지, 유사투자자문 규제 강화 관련 국회 입법논의 적극 지원

4

금융소비자 신뢰 및 편익 제고

추진 배경

- 「금소법」 개정 등을 통해 촘촘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대응 현황

-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 금융상품 방문판매시 연락금지요구권 신설(금소법),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예방 노력 강화*
*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23.6.5.),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23.6.19.) 마련 등
- 금융상품·서비스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편익 제고
 - 소비자 요청시, 요양기관이 실손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법사위 통과('23.9.21.)
 - 진료기록 관리강화, 보험·동물병원 협력 강화,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 등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 펫보험 세미나('23.4.28.),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23.8.9., 농식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
 -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권 경쟁 확대를 위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현재 신용대출 대상으로 운영 중('23.5.31.~)
* '23년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

향후 대응방향

- 기 발표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소비자 신뢰 및 편익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검토

Ⅲ. 202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목 차

1. 금융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및 고정금리상품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7
2.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안 추진, 과도한 이자의 제한, 신속채무조정 확대 실시 및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37
3.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 38
4.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패널티 부과 필요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8
5.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고 홍보가 부족하며 불수용 사유도 불명확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8
6.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홍보 부족 및 낮은 수용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금리자동인하권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것 39
7.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39
8.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차주가 해당 부동산을 넘기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39
9.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한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 · 40

10.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채무조정한도가 과도하여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0
11.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생 현장과의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 40
12.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을 검토할
것 41
13.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으로 인해 성실납부자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체자 조건을 삭제할 것 41
14. 자영업자·중소기업 채무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동등한 협의가 어렵고 지원대상 기준도 엄격하므로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 41
15. 온라인 대환대출, 온라인투자연계 중개인 대출, 대출비교 플랫폼 간소화
등 핀테크를 이용한 이자 경감 방안을 고려할 것 42
16.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을 할 것 42
17. 우리나라 금융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친 예대마진을 보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저신용자를 위해 공정금리를 도입할 것 43
18. 국내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중심 구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할 것 43
19. 금리 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2030 청년들의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4

20.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	44
21.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대출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게 하거나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집주인이 지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4
22. 공공기록이 남은 최저신용자들도 연체나 체납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4
23.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제도개선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45
24.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5
25. 비대면 대출이 확대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5
26. 고금리 상황에서 내구제 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 ..	46
27.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47
28.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47
29. 일반 입출금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 같은 경우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48
30. 비대면 실명인증 시 신분증 사본 도용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	48

3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할 것 48
32.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을 위해 의료계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48
33.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49
34. 흥국생명이 보험판매대리점 설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이직이 많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관련 실태를 파악할 것 49
35.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9
36.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에 대한 해결 없이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49
37.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치료 절차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만들 것 50
38.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50
39.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환매요구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50
40.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51
41.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51
42. 불법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위반 사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1

43. 개인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법령상 공매도 기준 설정, 공매도 총량제,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52
44.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 53
45. 물적분할이 핵심사업을 분리 상장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주주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53
46. 물적분할 동시상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 시가보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3
47. 기업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실지급 액수가 적고 포상금 산정 시 신고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개선할 것 53
48.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보수의 급격한 상승 및 지위 남용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
49.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4
50.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안펀드의 조속한 집행 검토 및 기업 환헤지 목적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54
51. 증안펀드가 적기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54
52. 자본시장조사단의 압수수색 및 직접인지 사건 수가 매우 저조하므로 조사단을 해체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에 편입시킬 것 55

53. 총수익스와프(TRS) 제도와 5%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시에 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55
54.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에 대해 관련 부처와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	56
55. 금리상승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56
56.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원대상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56
57. 은행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56
58.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증권 대책 마련, 지자체 보증 유동화 증권에 대해 지자체·정부가 보증책임 확약을 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57
59.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ABCP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57
60. 금융회사 상설 자금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57
61. 지방은행 점포 및 ATM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동점포 활성화, 고령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우체국 업무제휴 및 은행대리업 도입 등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7
6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8
63. 농민 대상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최저이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58

64.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대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 가능한 관리 상품으로 재조정할 것	58
65. 가상자산거래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가상자산을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59
66. 업비트의 루나 셀프상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	59
67. 지난 정부에서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앤 정부 공무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으로 이직한 현황을 조사할 것	59
68.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불법토토, 성착취물 및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59
69. 부산에 바이낸스 거래소 설립 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 ·	60
70. 외환 사전송금이 코인환치기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정상적 거래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0
71. 가상자산거래소가 계정을 둔 은행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안을 마련할 것	60
72. 산업성장 측면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상장 실태를 파악할 것	61
73. 아로와나 코인을 이용한 한컴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61
74. 빗썸코리아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	61
75.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공시 시스템 정비 및 투자조합에 대한 규율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61

76.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스템 정비 기간 및 거래시스템 사전 운영 기간을 부여 필요성을 검토할 것 62
77.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62
78.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2
79. 코인 발행 후 해당 재단이 코인을 통하여 시세를 조종할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62
80. 코인 관련 모럴 해저드, 이권 카르텔, 허위 공시로 인한 MZ세대들의 투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63
81.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미발급으로 원화 출금을 못하는 외국인 및 법인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63
82.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카드사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 63
83.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하여 서울-부산-전주를 연결하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4
84.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전 등 충청권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7페이지, 14페이지에서 각각 국정과제로 재확인(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 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 추진)한 충청권 지역 은행 설립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국정과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편입시켜 관리할 것 64

85.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것 64
86.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할 것 65
8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지정된 대부분이 상호 중복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5
88. 금융 선진화를 위해 직접투자 위주의 글로벌 펀드 조성 및 정보·자산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65
89. 현실성이 없거나 기술탈취 논란이 있는 서비스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5
90.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및 서비스 항목별 공시를 제도화 할 것 .. 66
91. 금융기관의 횡령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66
92. 태양광 관련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진 상황이므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66
93. 금융위기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모두 이관하여 조직을 선제적으로 개편할 것 67
94.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민간금융기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 67
95.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8

96.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중은행에 무선해킹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 68
97.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 시 구매기업 지급불능에 따른 리스크 및 부실채권 매입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할 것 68
98. 마이데이터 업체가 신용정보를 유상판매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69
99.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할 것 69
100. 불법외환송금의 정확한 규모 및 자금 성격이 불명확하므로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맺어 관리·감독할 것 69
10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평가를 ESG기준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므로 그 역할을 금융위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0
102.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 70
103.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 70
104.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수단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71
105. 기업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 시 일반주주의 의사가 무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어 일반주주의 이익이 잘 고려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1
106. 신용정보법 통과로 새로운 신용정보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층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71

107. 금융권 채용 확대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적극적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	71
108. BNK지주회사 회장 비리 등에 대한 철저히 감사할 것	72
109. 금융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주계열 여신전문회사의 신용공여 한도 기준을 완화할 것	72
110. 론스타 사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행)	72
111.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은 기관에는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ESG 공시제도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 으로 추진하고 ESG 공시에서 환경 및 사회 정보를 강화할 것	73
1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분리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73
113.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금융을 확대할 것	73
114.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일정한 업종별 단체에 신용카드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할 것	73
115.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유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비상대응 의무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74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 금융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및 고정금리상품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p>	<p>□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 있음</p> <p>*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연39.6조원, 1월~)</p> <p>*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발표(5.24)</p> <p>* 「가계대출 현황 점검회의」 개최(8.10일, 9.13일) (DSR 산정만기 개선, 변동금리 Stress DSR 등)</p> <p>□ 향후에도 금융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겠음</p>
<p>2.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안 추진, 과도한 이자의 제한, 신속채무조정 확대 실시 및 가계부채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p>	<p>□ 취약층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저신용 청년→저신용 전연령, '23.4월) 하는 한편,</p> <p>○ 연체 채무자의 이자·추심 등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안)」(정부안)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p> <p>* '22.12월 국회제출, 정무위 소위 계류중</p> <p>□ 금리상승기 주담대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대출에 대해 1년 한시적으로 기존대출 시점의 DSR 적용허용 및 프리워크아웃(최대 3년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 확대* 등 시행하였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현행) 재무적 곤란사유 &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 70% & 9억원미만 주택보유자 추가</p> <p>□ 향후에도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보완·마련해나가겠음</p>
3.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 규모를 확대할 것	<p>□ '23년 28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p>
4.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패널티 부과 필요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정부는 법과 규정(은행업감독규정, 금융규제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가계대출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노력을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p> <p>※ '22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된 만큼, 총량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가계부채 양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진행중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행심위完) 실시 등)</p> <p>○ 향후에도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p>
5.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대출의 비중이 너무 높고 홍보가 부족하며 불수용 시 사유도 불명확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23.2월, 소비자 안내 강화, 불수용 사유 안내 세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p> <p>* <보도자료, '23. 2. 9.> 소비자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홍보 부족 및 낮은 수용률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금리자동인하권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23.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선제적 추가 안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p> <p>* <보도자료, '23. 2. 9.> 소비자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p>
<p>7.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정책보증 지원*에 기반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해 금리상승 위험으로부터 청년 등을 보호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하였음('23.3월)</p> <p>* 고정금리 대출임을 감안, 보증비율 확대(90%→100%), 보증료를 인하(0.1%p ↓)</p>
<p>8.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차주가 해당 부동산을 넘기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운영 중이며, '23년 대출실적·비중 모두 크게 확대*</p> <p>* 공급액(정책모기지 중 비중): ('22)9조원(30.9%) → ('23.7말)16.1조원(42.6%)</p> <p><input type="checkbox"/> 민간은행 유한책임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주신보 출연금 우대요율 상한을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해 유한책임대출 취급유인 강화하였음('23.9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로 한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시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하였으며, (주택4억→6억, '22.11.7.~12말)</p> <p>○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초 출시당시 주택가격 요건을 9억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음</p>
<p>10.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채무조정한도가 과도하여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새출발기금 홍보,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p> <p>○ '23.8월말 기준 35,803명이 55,536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에 따른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부터 지원 필요성을 사전 심사하는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p>
<p>11.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생 현장과의 소통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음</p> <p>○ 아울러,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중에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새출발기금 관련 지역 설명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 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을 검토할 것</p>	<p>□ 정부는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5.24)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을 검토하기로 발표하였으며,</p> <p>○ 거시경제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검토하겠음</p>
<p>13. 새출발기금의 연체자 조건으로 인해 성실납부자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체자 조건을 삭제할 것</p>	<p>□ 새출발기금은 연체차주뿐만 아니라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 차주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p> <p>○ 다만, 연체 우려가 없는 차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 고려시 신중검토 필요</p>
<p>14. 자영업자·중소기업 채무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동등한 협의가 어렵고 지원 대상 기준도 엄격하므로 금융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p>	<p>□ 금융위는 금감원 및 전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자율 지원을 위한 매뉴얼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22.9.26.)하였음</p> <p>* 만기연장 : '25.9월까지 지원</p> <p>* 상환유예 : '23.9월까지 상환유예 조치가 유지되고, 이후에는 차주와 금융회사가 수립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어 최대 '28.9월까지 이용 가능</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온라인 대환대출, 온라인투자연계 중개인 대출, 대출비교 플랫폼 간소화 등 핀테크를 이용한 이자 경감 방안을 고려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개시('23.5월)</p> <p>* '23.9.15일 기준 67,384건, 1조 5,849억원 이동 평균 금리인하 폭은 약 1.5%p 총 연간 이자절감액은 300억원 이상</p>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허용 검토중</p> <p>* 3개사 신청, 추가 수요조사 진행중</p> <p><input type="checkbox"/> (플랫폼 간소화 관련)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웹뷰 방식*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오인 지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협의</p> <p>* 대출비교 플랫폼 내에서 직판업자가 관리하는 웹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서비스</p> <p>○ 앱 화면 내에서 대출실행 주체가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안내 등</p>
<p>16.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수정 검토하고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을 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그간의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향후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마련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 부실채권 비율,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과 관련한 지표를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7. 우리나라 금융권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친 예대마진을 보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저신용자를 위해 공정금리를 도입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방안,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등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p> <p>○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국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음</p>
<p>18. 국내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중심 구조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은행권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23.7월)을 발표하고, 제도개선 추진 중</p> <p>○ (금리경쟁 촉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및 예금중개서비스 구축, 금리공시 확대 등 추진</p> <p>○ (비이자이익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은행권 벤처투자 확대 등</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p> <p>○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5.24.)을 발표하였으며,</p> <p>○ 「가계부채 현황점검회의」(9.13)를 통해 변동금리 Stress DSR을 연내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국내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9. 금리 인상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2030 청년들의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정책보증 지원*에 기반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출시해 금리상승 위험으로부터 청년 등을 보호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하였음(‘23.3월)</p> <p>* 고정금리 대출임을 감안, 보증비율 확대 (90%→100%), 보증료율 인하(0.1%p ↓)</p>
20.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조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p><input type="checkbox"/>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시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하였으며, (주택4억→6억, ‘22.11.7.~12말)</p> <p>○ 특례보증자리론은 ‘23년초 출시당시 주택가격 요건을 9억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음</p>
21.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대출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받게 하거나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집주인이 지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세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대위변제 등록을 유예하고 관련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였음(‘23.6~)</p> <p><input type="checkbox"/>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금공·SGI 보증 전세대출 잔여채무대상 최대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병행 중</p>
22. 공공기록이 남은 최저신용자들도 연체나 체납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진흥원은 과거 연체·체납 경험이었더라도 현재 연체나 체납이 없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으며(‘22.9월),</p> <p>○ 현재 연체중이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소액생계비대출’도 출시(‘23.3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제도개선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 확대(3천→4천만원), 부동산 투자한도 상향(1천→2천만원, 다만, 부동산PF 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p> <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3조 개정('23.6.7.)</p>
<p>24.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p>	<p>□ 법 제정안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음 (박재호 의원실, '23.2~4월)</p> <p>* 금융위에 사기범죄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문은 제외 요청</p> <p>○ 향후,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음</p> <p>* '23.6.27.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보류</p>
<p>25. 비대면 대출이 확대되면서 명의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p>	<p>□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강화 추진</p> <p>○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금융결제원)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24.1월 시행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6. 고금리 상황에서 내구제 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을 통해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실시(궐련 설문조사)하였으며,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신·변종 불법사금융 적발시 소비자 정보 등을 통해 피해유형·예방방법 등을 적극 홍보 □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 제고·홍보 지속 ○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중 9.8조원을 공급 및 신규상품 출시 (최저신용자특례보증('22.9월)·소액생계비 대출('23.3월) 등) ○ 불법금융광고를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불법사금융 공급 차단을 위해 노력 ○ 내구제 대출과 같이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TF를 통해 정보공유·건의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7.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p>	<p>□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통신분야 대책 마련, ▲단속·검거를 위한 노력,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 및 교육 등 다각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중</p> <p>* (구성) 국조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정부합동수사단, 국정원</p>
<p>28.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p>	<p>□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 제고·홍보 지속 ○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구제 <p>* '22년 중 9.8조원을 공급 및 신규상품 출시 (최저신용자특례보증('22.9월)·소액생계비 대출('23.3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금융광고를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불법사금융 공급 차단을 위해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9. 일반 입출금계좌와 달리 자유적금 계좌 같은 경우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input type="checkbox"/> 자유적금계좌의 사기악용 방지를 위한 은행권 모범사례*를 신속대응체계를 통해 공유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23.10월) * 본인명의 연계 수시 입출금계좌를 통한 입금만 허용
30. 비대면 실명인증 시 신분증 사본 도용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	<input type="checkbox"/> '22.9월 「금융분야 보이스포싱 대응 방안*」을 마련·발표하였고, 그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중임 * 신분증진위확인 시스템 이용 확대 및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 등
3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맞지 않게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개선할 것	<input type="checkbox"/>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 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중임 * 금융위 '23.7.20일자 보도자료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수행된다" 참조
32.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추진을 위해 의료계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 보험업계와 청구 전산화 추진방안 논의 ○ 「보험업법」 법사위 통과('23.9.21일) → 법 통과시 의료계·보험업계와 협의하여 청구전산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준비(법 공포후 1년 후 시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3.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
34. 흥국생명이 보험판매대리점 설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이직이 많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관련 실태를 파악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감원에서 흥국생명 정기검사('23.4~5월) 기간 중 관련 실태파악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후속조치 진행 중
35.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휴면보험금 출연제도 개선 ○ 생·손보험회,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휴면보험금 출연시기를 현행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1년 앞당기기로 결정('23.6.28일 보도자료)
36.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에 대한 해결 없이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23.7월) 소비자 피해와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 방지하기 위한 부가조건 부여 ○ '24년 중 서비스 출시를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세부 운영사항 등 협의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7.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치료 절차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만들 것</p>	<p>□ 경상환자 과잉진료방지 제도개선 시행* ('23. 1월)으로 경상환자의 부상정도에 비해 소위 향후 치료비(합의금)가 과도하게 지급 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p> <p>* 4주이상 장기치료시 진단서제출 의무화, 치료비(대인 II) 과실책임주의 도입</p> <p>○ 앞으로도,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음</p> <p>*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국토부 산하)은 「향후 치료비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p>
<p>38. 빛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p>	<p>□ 보험업계, 생·손보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용보험 상품을 개발중</p> <p>* 예)A생보사, 기존 신용보험 보장범위에 더해 중증질환 수술비도 보장하는 상품 개발</p> <p>○ 또한, 보험 비교·추천플랫폼에서 가능한 상품 범위에 신용보험도 포함*하도록 방안 발표('23.4월)</p> <p>* 자동차, 실손, 단기보험(가입주기 1년 이내), 신용보험 등 포함</p>
<p>39. 고금리 저축성 보험에 환매요구권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p>	<p>□ 현재 금감원, 전문가, 업계로 구성된 TF가 운영중이며,</p> <p>○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보험 소비자 보호 등 제반 사항을 고려중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0.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 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개인, 단체실손 중복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완료('23.1월 시행)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23.1월 시행)
41.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input type="checkbox"/>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법안소위를 통과('23.7.4) <div data-bbox="837 969 1442 1272"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①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②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의 자료요청권, ③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시 가중처벌, ④자동차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구제 등 </div> ○ 향후 다양한 보험사기방지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42. 불법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위반 사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22.12월)부터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3. 개인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법령상 공매도 기준 설정, 공매도 총량제,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p>	<p>□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중이며,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p> <p>※ 코로나19 등에 따른 증시변동성 확대로 '20.3.16일 전종목 공매도 금지 → '21.5.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 부분재개</p> <p>□ 한편, 주식시장 신뢰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함</p> <p>○ '22.7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이행을 완료</p> <p>* 개인 대주거래 담보비율 완화(140→120%), 90일 이상 장기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 신설 등</p> <p>○ 또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21.4월)을 통한 적극적 과징금 부과 및 조치대상자 공개('23.2월~)를 실시중</p> <p>* '23.1~7월 중 총 87억원 부과</p> <p>- 한편,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를 위해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중('23.9월 발표)</p> <p>* 기관간 협업체계 개편, 신고 활성화, 이상거래 대응시스템 개편 등</p> <p>□ 향후에도 제도개선 사항들을 정착시켜 나가며,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노력도 지속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4.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	<input type="checkbox"/> '22.12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됨('23.5월, 윤창현 의원안)
45. 물적분할이 핵심사업을 분리 상장하는 용도로 활용되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3종의 보호장치를 마련('22.9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해당 제도가 현재 시행 중* <p>* ①물적분할시 공시강화('22.10월, 공시서식 개정) ②주식매수청구권 부여('22.12월, 자본법 시행령 개정) ③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22.9월 거래소세칙 개정)</p> <input type="checkbox"/> 일반주주 보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46. 물적분할 동시상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 시가보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현행 제도가 상장회사 가치 평가의 대표 지표인 시가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당사자간 협의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47. 기업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실지급 액수가 적고 포상금 산정시 신고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이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개선할 것	<input type="checkbox"/> 건별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포상규정* 개정 완료('23.5.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8.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보수의 급격한 상승 및 지위 남용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회계제도 보완방안」(6.12.) 마련·발표 후 '24.1월부터 시행 목표로 추진중</p> <p>○ (감사보수 급증)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공인회계사회 회칙 등 개정 중)</p> <p>○ (지위 남용) 권한 있는 중립적 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외감법 승·규정 개정 중)</p>
<p>49.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에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많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그간 객관적이고 정량적 요소 위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동 심사 기조를 엄격히 유지해 나갈 계획</p> <p>* 40인 이상, 대표이사 경력 10년 이상, 규모별 품질관리담당자 일정수 이상 등</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신규진입을 독려하여 상장사 감사인 간 품질경쟁을 유도할 계획</p>
<p>50.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안펀드의 조속한 집행 검토 및 기업 환헤지 목적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증안펀드는 코로나19 및 대내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조성('20.4월)했으나,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황</p> <p>○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해가며,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p>
<p>51. 증안펀드가 적기에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증안펀드는 코로나19 및 대내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조성('20.4월)했으나, 실제 집행은 되지 않은 상황</p> <p>○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해가며, 유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2. 자본시장조사단의 압수수색 및 직접인지 사건 수가 매우 저조하므로 조사단을 해체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에 편입시킬 것</p>	<p>□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검찰, 금감원 등)과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23.9.21. 발표) ○ 동 개선방안에 따라, 기관간 협업 체계 강화,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 개선 및 관련 조직·인력 보강,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p>※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앞선 행정조사가 필수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행정 조사기관이고, 금감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불공정거래 수사기관으로서 양 기관의 성격이 달라 기관간 통폐합은 어려움
<p>53. 총수익스왑(TRS) 제도와 5%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시에 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p>	<p>□ TRS 거래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하여 불투명한 정보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23.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국내외 제도 현황, 관련 연구 등을 참조하여 TRS 관련 5%를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4.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부실 위험에 대해 관련 부처와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할 것	<input type="checkbox"/>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매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부동산 PF 안전을 부의하여 논의중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이에 대비해나가겠음
55. 금리상승으로 여신전문금융업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여전사 유동성 점검·관리를 위해 위기 상황분석(Stress Test) 등을 통해 취약 부문 모니터링 실시 <input type="checkbox"/>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을 포함한 50조원+a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마련('22.10.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56.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지원대상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예정 * '23.9월 현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김희곤 의원안, 정부안)
57. 은행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	<input type="checkbox"/>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을 발표('23.3월)하고, * ❶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❷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 ❸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❹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중(은행업감독규정 '23.10월중 개정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8.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증권 대책 마련,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에 대해 지자체·정부가 보증책임 확약을 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 강원도를 비롯, 모든 지자체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확약 발표 (‘22.10.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행안부)</p>
<p>59.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ABCP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을 포함한 50조원+a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마련(‘22.10.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p> <p><input type="checkbox"/> PF-ABCP^{단기} → 장기대출^{전환}을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신설(주금공, HUG)</p>
<p>60. 금융회사 상설 자금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p> <p>* ‘23.9월 현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김희곤 의원안, 정부안)</p> <p>○ 금융안정계정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협의 등을 지속할 예정</p>
<p>61. 지방은행 점포 및 ATM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동점포 활성화, 고령층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우체국 업무제휴 및 은행대리업 도입 등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하였고(‘22.6월), 관련 과제도 지속 추진 중임</p> <p>* 단순업무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은행대리업 도입, 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 고령층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입대상 농어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제도 개선 추진('23.9.22일 시행)</p> <p>*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23.3월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23.9월 개정)</p>
<p>63. 농민 대상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최저이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을 운영 중</p> <p>* 재해복구자금 1.5%,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 1.8%의 낮은 고정금리(취급기관 동일금리)로 대출 (농식품부 : 취급금융기관에 이자차이 보전/ 농신보 : 대출금액 최대 5억원까지 전액 특례보증)</p> <p><input type="checkbox"/> 재해 발생시마다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재해대책자금 프로그램 안내</p> <p>* 재해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파견하여 프로그램 안내(금감원, 협회 등)</p>
<p>64. 청년도약계좌의 목적, 대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속 가능한 관리 상품으로 재조정할 것</p>	<p><input type="checkbox"/> '23.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운영 중임</p> <p>○ 안정적인 상품 운영으로 청년 자산형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속 지원할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5. 가상자산거래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가상자산을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7.18일) ➡ '24.7.19일부터 시행 예정</p> <p>* (주요내용)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금 예탁 및 가상자산 보관 의무 부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형사처벌 근거 마련</p>
<p>66. 업비트의 루나 셀프상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상장 관련 사항을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음</p>
<p>67. 지난 정부에서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앤 정부 공무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으로 이직한 현황을 조사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여·야당 의원이 발의한 세 가지 의원 입법(안)을 통합한 '정무위 대안'으로 결정된 사안임</p> <p><input type="checkbox"/> 한편, 당시 클라우드펀딩 담당자(자산 운용과 등) 중 금융위에서 퇴직하여 클라우드펀딩 업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한 사람은 없음</p>
<p>68.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불법 토토, 성착취물 및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검찰·금융위·FIU·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보·거래소 등으로 구성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23.7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9. 부산에 바이낸스 거래소 설립 시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	<p><input type="checkbox"/> 부산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신청이 접수된 바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신청할 경우, 법상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음</p>
70. 외환 사전송금이 코인환치기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정상적 거래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논의를 거쳐,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음('23.7월)</p> <p>○ 해당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이상거래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를 강화하였음</p> <p>* 가상자산 거래 관련 원화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이용자 등</p>
71. 가상자산거래소가 계정을 둔 은행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안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은행권,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최근 마련하였음</p> <p>* '23.7.27일 발표, '24.1.1일 시행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2. 산업성장 측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상장 실태를 파악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상장(신규 거래지원)현황 등 실태조사 완료*</p> <p>*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23.3.20일)</p> <p>○ 원화마켓의 신규 거래지원이 32건으로 상반기 116건 대비 큰 폭 감소(△72%)</p> <p>○ 신규 거래지원은 시장자율 영역. 다만, 시장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신규 거래지원 심사·종료 가이드라인 마련('23.7월)</p>
<p>73. 아로와나 코인을 이용한 한컴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해당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해당 수사 관련 금융당국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가상자산합수단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음</p>
<p>74. 빗썸코리아 대주주 적격 심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특금법상 대주주 요건은 신고 취소 대상이 아님</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23.9.15., 윤창현의원)되었고, 그 법안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임</p>
<p>75.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공시 시스템 정비 및 투자 조합에 대한 규율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7.18일)시 채택된 정무위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23.9월~)</p> <p>*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마련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6.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시스템 정비 기간 및 거래시스템 사전 운영 기간을 부여 필요성을 검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23.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과 자본시장 제도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방안 포함 ○ '23.7월 후속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p><input type="checkbox"/> 법안 추진 및 하위법규 정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p>
<p>77.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 TF 구성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검찰·금융위·FIU·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보·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23.7월)</p>
<p>78. 1거래소-1은행 체제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실명계정 발급여부는 개별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사적계약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소비자 선택권 및 시장불균형,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으면 검토해나가겠음
<p>79. 코인 발행 후 해당 재단이 코인을 통하여 시세를 조종할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7.18일) ➡ '24.7.19일부터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시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0. 코인 관련 모럴 해저드, 이권 카르텔, 허위 공시로 인한 MZ 세대들의 투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p>	<p><input type="checkbox"/> FIU가 반기별로 실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보유 규모” 분석 내용 등을 살펴보고 향후 가상자산 관련 조사 항목 확대 등을 검토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가상자산 투자 피해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음</p>
<p>81.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미발급으로 원화 출금을 못하는 외국인 및 법인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자금세탁방지 필요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도 균형있게 검토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음</p>
<p>82.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카드사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하는 것을 중단하고,</p> <p>○ 해외 가맹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일 관련 정보 공유 중</p> <p><input type="checkbox"/> 신규 설립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카드사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 구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인지 후에는 즉각 차단 중</p> <p>○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를 카드사간 신속히 공유하여 가상자산 구입 카드 결제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차단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3.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하여 서울-부산-전주를 연결하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중심지 법에 따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될 문제</p> <p>○ 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 및 경쟁력,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성 등을 갖추기 위한 전북도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p>
<p>84.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전 등 충청권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지역공약> 7페이지, 14페이지에서 각각 국정과제로 재확인(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 추진)한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국정과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편입시켜관리할 것</p>	<p>□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TF」논의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 허용,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음('23.7월)</p> <p>○ 사업자가 지방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현행 법령상 인가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심사할 예정임</p>
<p>85.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것</p>	<p>□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국정과제 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적극 추진</p> <p>○ 지방시대위원회(舊 균형위)에서 산은을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23.5.3 고시)</p> <p>○ 산은은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전부이전안 마련('23.7월)</p> <p>□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산은법 개정(본점 소재지 변경)과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 수립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6.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검토할 것	<input type="checkbox"/>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상 본점 소재지에 대한 개정 필요 ○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산은법 개정(본점 소재지 변경)과 구체적인 지방이전계획 수립 추진
8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지정된 대부분이 상호 중복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제도 소개 영상 홍보** 등을 통해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7회 개최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게재 ○ 제도 홍보, 신규 지정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지속 추진
88. 금융 선진화를 위해 직접투자 위주의 글로벌 펀드 조성 및 정보·자산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해외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업무는 한국투자공사, 연기금 등이 하는 만큼, ○ 장기적으로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89. 현실성이 없거나 기술탈취 논란이 있는 서비스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 기술탈취 여부 등 기업윤리적 요소도 반영하여 심사 중이며,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0.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및 서비스 항목별 공시를 제도화할 것	<input type="checkbox"/> 빅테크 수수료 비교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2.12월)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선불결제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시 중('23.3월~) <input type="checkbox"/> 향후 반기별(매년 2월, 8월) 공시를 통해 수수료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
91. 금융기관의 횡령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및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23.6월)」을 발표 <input type="checkbox"/> 동 방안을 반영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작성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등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92. 태양광 관련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대출금 회수 위험이 커진 상황이므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업권별 선제적 건전성 관리노력을 통해 대출자산의 부실확대 우려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전금융권에 대하여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23.5월), 특별 대손준비금 도입('23.10월 예정) 등 * [2금융권] 다중채무자(저축은행) 및 건설업 등 위험업종(상호금융)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input type="checkbox"/> 채무조정, 연체채권 상·매각/유동화 등 부실채권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지속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금융권의 대출자산 건전성 관리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관리대책을 강구할 계획
<p>93. 금융위기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모두 이관하여 조직을 선제적으로 개편할 것</p>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중 <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감원과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p>94.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민간금융 기관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p>	<input type="checkbox"/>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상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철저한 운영 및 안내 지속 * ①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 하였던 업무에 대하여 퇴직 후 영구히 취급 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②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제1항) ③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최근 2년 이내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기관장에 신고(「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5.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23.6월)」을 발표</p> <p>○ 동 방안은 금융회사 각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하고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p> <p>○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p>
<p>96.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신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중은행에 무선해킹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p>	<p>□ 금융시스템 등이 설치되는 금융회사 전산실과 금융회사 내부망은 원칙적으로 무선통신망 설치가 제한</p> <p>*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감독규정 §11</p> <p>○ 무선통신망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무선통신망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기관의 무선해킹에 대비</p> <p>* 전자금융감독규정 §15⑥</p>
<p>97.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 시 구매기업 지급불능에 따른 리스크 및 부실채권 매입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할 것</p>	<p>□ 구매기업 지급불능 시 채권보전, 소송 등 법적권리 행사와 함께 상환의사를 확인하여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p> <p>□ 또한, 부실채권 매입방지를 위해 구매기업 신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매입심사를 실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8. 마이데이터 업체가 신용정보를 유상판매하는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시, 정보주체에게 유상제공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 계류 중인바,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법안 논의 절차에 적극 참여할 계획</p> <p>* 신정법 개정안('22.11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개보법 개정안('22.7월 박성민 의원, '22.11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p> <p>□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부수업무(데이터 판매 및 중개) 심사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유상제공여부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p> <p>○ 또한 제3자 제공동의 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24.1Q 예정)하고 있으며, 동의내역 일괄 조회시 유상 제공여부도 조회 항목에 포함하였음</p>
<p>99.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검토할 것</p>	<p>□ 정부는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왔으며, 관련 내용을 '23년도 금융위 국정감사업무보고 시 보고할 예정임*</p> <p>* 관련 사항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해 왔음('21.10월, '22.3월, '22.10월, '23.3월)</p>
<p>100. 불법외환송금의 정확한 규모 및 자금 성격이 불명확하므로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맺어 관리·감독할 것</p>	<p>□ 불법외환송금 관련 은행권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p> <p>○ 검사결과등을 기초로 추가 보완방안 또는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평가를 ESG기준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므로 그 역할을 금융위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투자 확산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도입되었음('16~)</p> <p>○ 민간자율적인 규범인만큼,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를 직접적 담당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p>
<p>102.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의 입증책임을 소상공인들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할 것</p>	<p>□ 전자금융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사고 등에 대해 사고보상책임을 규정(전자금융법§9①)</p> <p>□ 카카오 등 대형 빅테크는 결제사고 발생시 선보상 제도를 운영 중</p> <p>○ 이에 따라 결제사고 등을 빅테크가 선보상하고, 사후적으로 책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p>
<p>103.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의 전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p>	<p>□ 전 금융권에 IT 비상대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22.11월~'23.2월)</p> <p>○ 10여개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23.3월)</p> <p>□ 점검을 통해 파악된 미흡한 사항을 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였음('23.5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4.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 수단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플랫폼 기업의 금융분야 진출에 대한 국제적 논의·규제 동향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나가겠음
105. 기업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 시 일반주주의 의사가 무시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어 일반주주의 이익이 잘 고려되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과 자산 및 이익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 내재가치 제고 ○ 작년 배당성향도 31.2%로 4대 지주 평균(25.4%)에 비해 높은 수준
106. 신용정보법 통과로 새로운 신용 정보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층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input type="checkbox"/> 주금공 대안신용평가 등 개인신용 평가모형 재구축 용역 완료('23.4월) 후, 내규개정·전산개발 중('23.10월 시행예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심사 시 자동이체 이력 등 대안 신용정보를 적용하여 청년층 등 이용자를 지원 중
107. 금융권 채용 확대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적극적 소통방안을 마련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23.2월) 등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논의 및 폭넓은 채용 기회 제공 등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필요성 강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권은 금융 IT 인재 채용설명회('23.5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매년), 금융권 채용정보 안내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한 금융권 일자리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금융분야 채용정보를 적기 제공하는 등 채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
108. BNK지주회사 회장 비리 등에 대한 철저히 감사할 것	<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은 '22.10~11월 중 BNK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재절차 진행 중
109. 금융산업의 해외진출과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주계열 여신전문회사의 신용공여 한도 기준을 완화할 것	<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일정기간(예시 : 3년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해외진출 초기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할 계획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규정(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검토 중('23.하반기)
110. 론스타 사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행)	<input type="checkbox"/>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진행상황 등 주요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중 ○ 다만, 일부 자료는 현재 진행중인 취소신청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모든 중재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공개여부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1.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은 기관에는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ESG 공시제도를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ESG 공시에서 환경 및 사회 정보를 강화할 것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ESG 공시제도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왔음</p> <p>* ESG 금융추진단 회의 개최('23.2월, 4월),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참석(기재부 주재, '23.2월, 5월), ESG 공시 세미나('23.5월) 등</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관계부처와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을 논의할 계획</p>
1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분리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p><input type="checkbox"/>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한 경우 ESG 공시기준 마련 과정에서,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논의 하겠음</p>
113.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선박 금융을 확대할 것	<p><input type="checkbox"/>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캠코의 선박금융 및 펀드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5,000억원* 확대</p> <p>* ('22.12월) 6.3조원 → ('23.8월) 6.8조원</p>
114.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일정한 업종별 단체에 신용카드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할 것	<p><input type="checkbox"/>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 적용(전체 가맹점의 96% 수준)</p> <p>○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중인 점과, 적격비용 등 여타 수수료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15.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유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비상대응 의무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가 없는 전자금융업자 등의 비상대책* 운영현황을 점검('22.11월)</p> <p>* 재해복구센터를 이용해 핵심업무를 복구 목표시간 내(3~24시간) 서비스하도록 계획되어야 함(감독규정 §23⑧⑨)</p> <p><input type="checkbox"/> 일정 규모(연간 거래금액 2조원) 이상의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감독규정 개정)</p>

IV.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은 '23년도 9월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부적정한 보도자료 작성 관련('22. 2. 28. ~ '22. 3. 8.)」,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22. 3. 7. ~ '22. 4. 8.)」 및 「금융위원회 정기감사('23. 4. 24. ~ '23. 5. 24.)」 3건의 감사를 실시

< 공매도 금지조치에 대한 부적정한 보도자료 작성 관련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공매도 금지 관련 보도자료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때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금융위원회 회의의 의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완료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예산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서업무추진비를 기타운영비로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완료

<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등 선발제도 부당 운용 (통보)</p> <p>○ 2004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에 대한 진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시험의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할 때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선발이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게 이뤄지도록 하며, 수험생 부담 경감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진행중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금융위원회는 '23년도 9월말 기준 「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22.3.14. ~ 3.18.)」,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22.7.4. ~ 7.8.)」,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22.11.28. ~ 12.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종합감사('23.3.6. ~ 3.8.)」 총 4건의 자체감사를 실시

< 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미흡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협약 기관별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요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통합 교육시스템 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완료
<p>□ 채용 관련 규정 및 서류전형 심사기준 마련 필요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보완하고, 서류전형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완료
<p>□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확대 필요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채용시 2차 면접위원 수를 늘리는 등 면접 절차를 개선할 필요 	완료
<p>□ 불합리한 국외 출장 제도 개선 필요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보고서에 출장일별 상세 일정을 기재토록 하고, 불필요한 현지준비 및 정리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여비지급 시행세칙을 개정할 필요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신속처리질의 접수 창구 마련 및 책자 발간 (모범사례)</p> <p>○ 홈페이지에 신속처리 질의 접수 창구를 새로이 마련하여 기업 실무자, 감사인, 학생 등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질의하고, 신속히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K-IFRS 관련 신속처리 질의 중 빈번하게 인용되는 중요 질의회신을 선별하여 책자 발간</p>	완료

<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연구윤리 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권고) ○ 연구위원들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채용 지원자와 동일부서 근무 심사위원 미제척 (제도개선) ○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채용 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직원 채용시 각서 징구 관행 개선 필요 (제도개선) ○ 별정직원 채용 시 퇴직위로금 손해 충당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는 대신 별정직원운용요령에 규정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업무행태를 개선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 마련 필요 (제도개선) ○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 성격임을 고려하여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 및 내규의 명확화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을 인사규정에 포함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연구자일반직의 가산금 지급 투명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 가산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기별 가산금 기준금액, 등급비율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총회 대리참석시 위임장 미징구 (주의) ○ 총회 대리참석시 사원 대표자의 위임장 사전 징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완료
<input type="checkbox"/> 시재금 감사 철저 및 금융사고 예방 (모범사례) ○ 감사실 주관으로 잔액증명 직접 발급 등의 방법으로 시재금 감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	완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p>□ 감리결과 조치사항 이행보고기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p> <p>○ 감리결과 조치사항 이행보고기한 도과 건을 분기별로 감리총괄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이행보고기한 내 이행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결과 사후관리 필요</p>	완료
<p>□ 심사·감리 사건목록관리 관행 개선 필요 (권고)</p> <p>○ 효율적인 심사대상 회사 관리를 위해 ❶심사대상 회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❷심사대상 회사 식별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外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검증가능성을 제고할 필요</p>	완료
<p>□ 제척기간 도과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심의 일부 미완료 (주의)</p> <p>○ 제척기간 도과로 징계절차가 미완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p>	완료
<p>□ 상습 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가중 조치 필요 (통보)</p> <p>○ ❶상습 연수 미이수자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❷징계 가중조치를 규정에 맞게 부여하며, ❸상습 연수 미이수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여 연수 유도 대책 강구 필요</p>	완료
<p>□ 개업 공인회계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필요 (통보)</p> <p>○ 개업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보험가입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가입 사실 확인시 실효성 있는 징계처분 부과 필요</p>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손해배상공동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마련 필요 (제도개선)</p> <p>○ 손해배상공동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위원장 호선 절차를 이행할 필요</p>	완료
<p>□ 윤리위 및 위탁감리위 수당 지급 기준 개정 필요 (제도개선)</p> <p>○ 법정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규정상 윤리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거마비, 안건검토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p>	완료
<p>□ 민원처리관리대장 일원화 등 민원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원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p> <p>○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대장을 일원화하고, 민원처리 경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정비할 필요</p>	완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종합감사 지적내역 >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숙박비 지급 한도 설정 필요 (제도개선)</p> <p>○ 정부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여비규정 세칙에 숙박비의 지급 한도를 설정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계약 관련 내부규정 보완 필요(권고)</p> <p>○ 현재 회계규정상 입찰공고일이 7일로 지나치게 짧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기간을 보완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보조금 예산 집행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철저(주의)</p> <p>○ 보조금 예산 집행 시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관련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지방 핀테크 기업 입주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 변경 필요 (제도개선)</p> <p>○ 지방 핀테크기업 입주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조치 필요</p>	완료
<p><input type="checkbox"/>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대한 집행 관리·감독 개선 필요 (제도개선)</p> <p>○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현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중요자산은 실사점검 시스템을 확립하여 참여기업 관리·감독 개선 필요</p>	완료

V.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7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2개

가. 공공기관인 산하기관

-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4개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모기지, 전세대출보증,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지원
 - (신용보증기금) 담보력 부족기업·기술 기업 등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지원
-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3개
 - (한국산업은행) 성장동력산업 확충,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 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공급 전문역할 수행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및 재기·자립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총괄

나.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경제적 희생 지원

[참고] 공공기관 지정요건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300인 이상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300인 이상	4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 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3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기 타 산하공공기관		-	2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VI. 기타 사항

I. 일반 현황

□ 설립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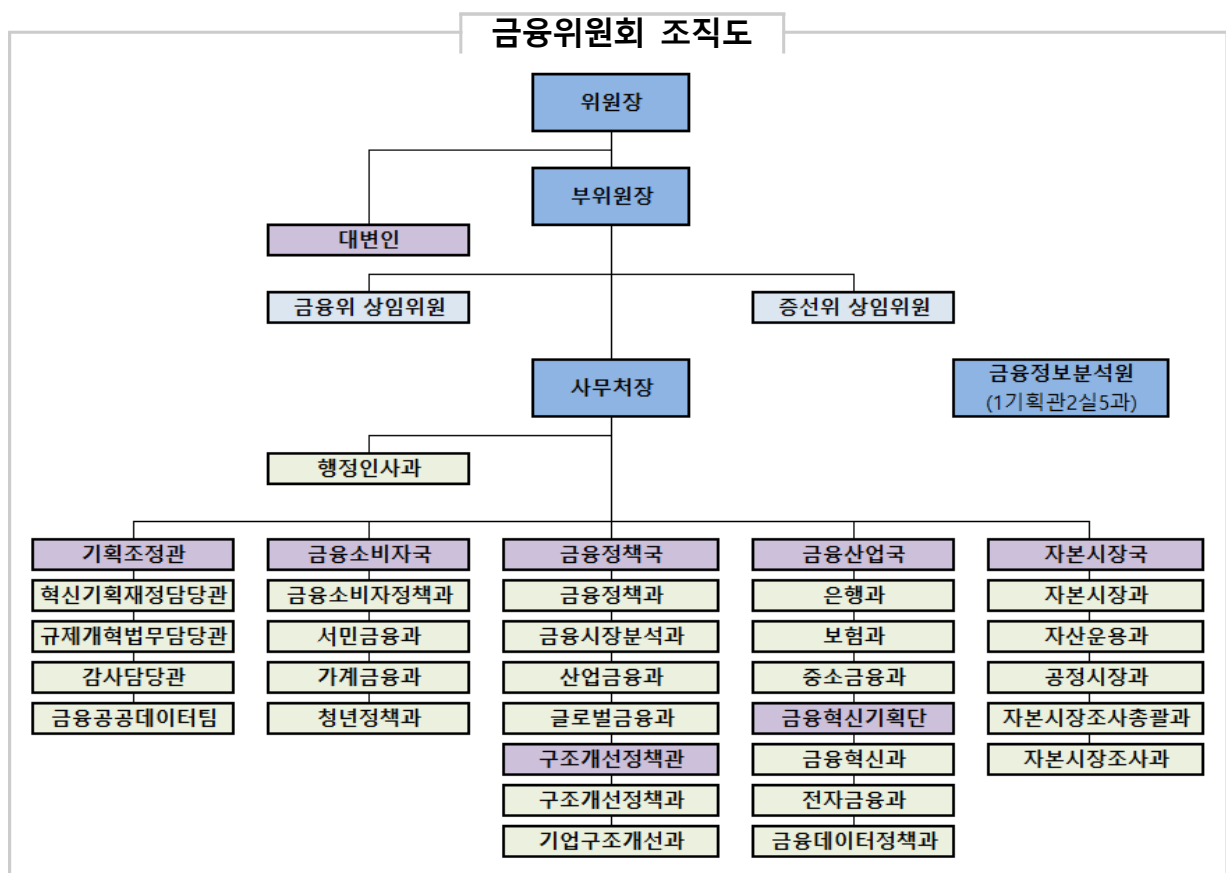
□ 주요업무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마련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재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인·허가
-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피해구제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등

□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대변인 1관 4국 1정책관 1단 25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인원 및 예산

- 정원 : 330명, 현원 : 340.5명 ('23.9월말 기준)
- 예산 : 일반회계 세입 723억원, 세출 3조 7,636억원

가. 세입 예산안

-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896억 2천 9백만원으로 2023년 예산대비 173억 4백만원 증가(23.9%)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23예산(A)	'24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72,325	89,629	17,304	23.9
과 태 료	24,506	36,135	11,629	47.5
과 징 금	44,542	49,532	4,990	11.2
가 산 금	150	150	-	-
기타경상이전수입	3,127	3,812	685	21.9

나. 세출 예산안

-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5,640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004억원 증가(21.3%)

(단위 : 백만원)

구 분	'23예산(A)	'24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3,763,619	4,564,032	800,413	21.3
□ 금융위원회 운영	1,603,619	2,064,032	460,413	28.7
○ 인 건 비	31,853	33,037	1,184	3.7
○ 기 본 경 비	8,414	9,518	1,104	13.1
○ 사 업 비	1,563,352	2,021,477	458,125	29.3
□ 내부 거래	2,160,000	2,500,000	340,000	15.7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160,000	2,500,000	340,000	15.7

Ⅱ. 부서별 주요기능

구 분	주요 기능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정리
기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국회 관계 업무 총괄 및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위원회 운영 ·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 비상계획업무 총괄
행정인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등 인사사무조직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금융소비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정책 및 제도에 관한 기획·총괄 · 서민금융정책의 수립·조정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정책 수립 · 가계대출 취약차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대부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금융위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금융정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총괄 ·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중소기업금융정책 및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 수립
구조개선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금 관리 및 예금자 보호 정책 수립 ·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기업부실위험 대응
금융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보험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신용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금융혁신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 수립 및 금융혁신 관련 제도 총괄 · 전자금융업 및 금융 IT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정보보호와 신용정보업에 관한 정책 수립·감독
자본시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자본시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및 공인회계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감독 ·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금융정보분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세탁방지제도 정책 총괄 및 검사·감독 제도 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및 제공 ·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력

Ⅲ.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총 46개)	법 률 명
금융정책 관련 (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 관련 (4)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6)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6)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 관련 (3)	·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관련 (2)	·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중소서민금융 관련 (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회계 관련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혁신 관련 (3)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감독 관련 (1)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별첨】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2023. 10.

**금 융 위 원 회
예 금 보 험 공 사**

목 차

I. 배경 및 경과	101
II. 보호한도 적정성 검토	102
1. 고려사항	102
[참고] 보호한도 상향 시 영향	103
2. 보호한도 상향 검토 시 도입방안	104
3. 보호한도 상향 시 예보료를 조정 방안	104
III. 예보료를 적정성 점검	105
1. 예보료 적립 현황	105
2. 예보료를 인상 검토	106
3. 요율한도 일몰연장 필요	106
[붙임1] 예보료를 한도 일몰연장 검토	107
[붙임2] 예보제도 개선 민관합동TF 주요 논의 결과	108

I. 배경 및 경과

- (보고배경) '21.8월, 국회(정무위 법안소위)는 예보료율 한도 일몰연장 관련 예보법 개정 시, 6개월마다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
 - 금융위·예금보험공사는 '23.8~10월까지 예보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는 계획('21.10월)과 진행경과('22.3월, '22.10월, '23.3월)를 국회에 보고
 - * 다음 일몰기한이 '24.8.31임에 따라, 약 1년 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함
- (주요경과) 국회에 보고한 계획에 따라 적정 예보료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22.3월~'23.6월)을 진행하고,
 -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22.3월~'23.9월)

< 국회보고 계획('21.10월 보고자료) >

■ 매년 3월말 및 정기국회(국감 업무보고시) 보고

연도	보고 시기	시기별 주요 보고내용
'21	10월	① 예보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22	3월	② '예보료율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절차개시 관련사항(의견 수렴 내용 및 검토과제 등)
	10월	③ '예보료율 등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업권 논의경과
'23	3월	④ '공적자금 재계산' 연구용역 중간보고(기금 건전성 등)
	8~10월	⑤ 목표규모·예보료율 적정수준 검토와 예보료율 한도 일몰조항 개정안

◆ 예보법상 예보료율 한도의 일몰연장 논의를 위해 목표규모 및 예보료율의 조정 필요 여부를 검토

Ⅱ. 보호한도 상향 검토

1. 고려사항

① 보호한도 상향 관련 찬·반 논의

- 현행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는 국제권고 수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01년 이후 1인당 GDP 증가(약 3배) 대비 절대금액이 낮음**

* (IMF) 1인당 GDP의 1~2배 ⇒ (韓) 1.2배 (IADI) 대다수의 예금자(90~95%) 보호 ⇒ (韓) 98.1%

** (美) USD25만(3.3억원), (英) GBP8.5만(1.4억원), (加) CAD10만(1억원), (日) JPY1,000만(0.9억원)

- 한편,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호(98.1%)되고 있고, 자금이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우려* 등이 제기

② 금융소비자·금융회사의 이해관계

- 금융소비자는 대체로 보호한도 상향을 선호하나, 예보료 인상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그동안 한도 이내로 자금을 분산예치*해온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 관리에 따른 편의성이 증가

* 예금자 1인 평균 약 7.4개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 중 (보호대상 예금에 한함)

- 금융회사는 대형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예보료 부담 증가 우려로 상향에 부정적이며, 업권 간 동일한 한도 적용을 선호

③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

-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제도의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 다만, 예금 전액보호는 예금보험제도의 취지와 최소비용의 원칙에 배치되어 금융위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참 고

보호한도 상향 시 영향 (※ 예보 연구용역 결과)

※ 다수 법안이 발의된 '1억원'을 중심으로 분석

- (예금자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시 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소폭 증가(98.1%→99.3%, 1.2%p)하며,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 5천만원 초과 예금자(1.9%)에만 국한될 수 있음
 - 다만, 한도 상향은 5천만원 이하로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보호예금) 보호예금 비율이 상승(51.7%→59.0%, 7.3%p)하여 보호효과가 다소 강화되나, 기금의 위험노출액 증가로 장기적으로 예보료가 인상되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자금이동) 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하여 저축은행 예금이 일부 증가(저축은행 예금의 16~25%)할 것으로 추정되나, 은행 예금의 1% 내외로 전체 시장영향은 제한적*
 - * 단, 저축은행 업권 내 소형사→대형사로의 자금이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며, 업권 내 과도한 수신경쟁 시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 (목표규모·예보료율) 연구용역 계량분석 결과, 한도 1억원 상향 시 목표규모·예보료율의 상향이 필요(각각 최대 20%, 27% ↑ 효과 발생)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목표규모 증가율(추정)】

구 분	보호한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
최초 목표규모	5천만원	1.5%	1.5%	1.2%	1.5%	3.0%
(증가율)	1억원 상향 시	(19.7% ↑)	(17.0% ↑)	(11.3% ↑)	(3.4% ↑)	(3.9% ↑)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 예보료율 증가율(추정)】

구 분	보호한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
현행 예보료율	5천만원	0.08%	0.15%	0.15%	0.15%	0.40%
(증가율)	1억원 상향 시	(23.1% ↑)	(27.3% ↑)	(13.8% ↑)	(2.6% ↑)	(0.0% ↑)

2. 보호한도 상향 검토 시 도입방안

※ 다수 법안이 발의된 '1억원'을 중심으로 분석

- ① (즉시 한도 상향)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즉시 한도를 상향
→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상향도 가능
 - ② ('28년 한도 상향) 일시에 한도를 상향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권의 부담능력이 복원된 상환기금* 종료('27년말) 이후에 한도를 상향
* 부보예금의 0.1%를 외환위기 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특별기여금으로 납부 중(~'27년)
 - ③ (단계적 한도 상향) 업권 간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혼란, 비은행권 리스크 확대 우려* 등 완화를 위해 '28년을 목표로 단계적 상향(예 : 현 5천만원 → '25년 7천만원 → '28년 1억원)
* 상호금융권 소관 부처는 예보 부보업권의 한도 상향 시 자금유출 우려로 상호 금융권도 동일한 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 (별도 한도 적용) 현행 유지 시에도 한도 상향과 별개로 사회 보장적 상품 등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대상을 지속 발굴
* DC·IRP 퇴직연금('15.2),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23.10 시행)

3. 보호한도 상향 시 예보료를 조정 방안

- ☐ 보호한도 상향 시 상향시점에 맞춰 예보의 보호범위 증가에 따라서 예보료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기금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
- ☐ 다만, 금융회사·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상환기금 종료('27년말) 이후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
* ①특별기여금으로 인해 현재 금융권의 부담능력이 크지 않은 점과, 특별계정 종료 시 목표규모 달성을 위해 요율 조정이 필요한 점, ②부실 발생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율을 신속히 인상할 수 있는 점도 감안

◆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향후 찬·반 논의,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

Ⅲ. 예보료를 적정성 점검

1. 예보료 적립 현황

- (목표대비 적립수준) '09년 목표기금제 도입 시 10년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보료율을 설정하였으나, 현재 목표에 미달*

* 최초 목표규모(100%, '09년) 대비 41.6%, 현행 목표규모(55%, '11년 축소) 대비 75.7%

- (저축은행업권) '22년말 기준 저축은행 고유계정은 △1.8조원,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6.7조원의 적자가 남아있는 상황

- 현재 고유계정에는 예보료가 적립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계정도 종료 시('26년)까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11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이후 저축은행 예보료는 100% 특별계정에만 적립

- (기금 대응여력 부족) '09년 설정된 최초 목표규모(100%)는 중형사 3~4개사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나, '11년 축소*된 현행 목표규모(55%)는 중형사 1~2개사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

* 각 업권 예보료의 45%를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납입함에 따름

【목표규모 하한(금액) 대비 기금적립액】 ('22년말 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계
부보예금액	1,835.1	56.4	649.0	228.9	110.8	2,880.2
A. 최초목표(100%) 금액	27.5	0.8	7.8	3.4	3.3	42.8
B. 현행목표(55%) 금액	15.1	0.5	4.3	1.9	1.8	23.6
C. 기금적립액	11.8	0.5	5.6	1.8	△1.8	17.9
최초목표 대비(C/A)	42.7%	54.1%	72.1%	53.1%	△53.8%	41.6%
현행목표 대비(C/B)	77.7%	98.4%	131.1%	96.6%	△97.9%	75.7%

2. 예보료를 인상 검토

- (최초 목표규모 달성 필요) 특별계정 종료('26년말) 시 최초 목표규모(100%)로의 환원이 필요하며*, 이 경우 현행 요율로는 목표 도달 곤란

* 최초 목표(100%)는 현재도 업권별 중형사 3~4개사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

- '26년말, 최초 목표(100%)를 10년 내 달성할 수 있는 예보료를 추정 시 은행·손보·저축은행 업권의 요율 인상이 필요(4~8bp)

【'26년 이후 필요 예보료를 (추정)】

구 분	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현행 예보료를	0.08%	0.15%	0.15%	0.15%	0.40%
필요 예보료를(추정)	0.12%	0.15%	0.15%	0.22%	0.48%

- (예보료를 부담여력) 특별기여금(0.1%, ~'27년말) 등 고려 시 업권의 추가적인 예보료를 부담여력은 제한적*

* 금융권 연간 납부금액 총 4.6조원 중 1.0조원(21%)만 예보기금 고유계정에 적립

-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예보료 45%, ~'26년말)으로 인해 요율 인상애 따른 적립효과는 일부(55%)에 한정

◆ 최소한 현행 예보료를 수준은 유지*하고, '26년 이후 최초 목표 규모(100%) 환원 및 업권의 부담여력을 종합하여 예보료를 인상을 검토할 필요

* 향후 부실 발생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율을 신속히 인상 가능한 점도 고려

3. 요율한도 일몰연장 필요

- 현재 예보법상 예보료를 한도(0.5%)의 일몰기한('24.8.31)을 앞두고 있으며, 일몰도래 시, 오히려 예보료율이 현행 대비 하락하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일몰연장 또는 삭제가 시급

- 일몰도래 시 예보료 수입('22년 기준 年 7천억원)이 크게 감소하여 기금안정성이 훼손되고, 현행 요율보다 법상 한도가 낮아 기금손실 발생 등 요율 인상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약

붙임 1

예보료율 한도 일몰연장 검토

- **현행 예보료율 한도(0.5%)는 '98.9월 일몰규정으로 설정되어 5차례 연장*된 후 '24.8.31 존속기한 만료 예정** (예보법 부칙)

* 공포일자(기간) : ①'02.12.26(5년) → ②'08.9.26(3년) → ③'11.5.19(5년) → ④'16.3.29(5년) → ⑤'21.8.17(3년)

- 존속기한 만료 시 '98.4월 당시의 금융업권별 한도로 환원될 예정

구 분		은행	금투	보험	저축은행	종금
예보료율 한도	종전('98.4월)	0.05%	0.10%	1.00%	0.15%	0.15%
	현행(~'24.8월)	0.50%				
예보료율	현행('09.6월)	0.08%	0.15%	0.15%	0.40%*	0.15%
	종전 환원 시	0.05%	0.10%	0.15%	0.15%	0.15%

*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기금적자 확대에 보험료를 추가 인상('11.7월)

부칙 <법률 제9134호, 2008.9.26.>

②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기관이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일몰연장 필요성**

- ① **현행(55%) 및 최초 목표(100%) 대비 기금적립액이 부족한 상황**
 - 다만, 과거 구조조정 비용 분담(~'27년) 등으로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여력이 제한적이므로 최소한 현행 예보료율 수준은 유지할 필요
- ② **요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종전 한도로 환원될 경우 예보료 수입이 감소('22년 기준 年 7천억원)하여 기금안정성 훼손**
 - 현행 요율 기준으로 수립된 특별계정(△6.7조원) 상환계획에도 차질
- ③ **향후 부실 발생 시, 요율 인상 등 기금손실 회복수단이 필요하나, 종전 요율 한도로 환원 시 현행 요율보다 법상 한도가 낮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약**

➡ **현행 예보료율 유지 및 부실 발생 시 추가 요율 버퍼 확보 등을 위해 ①일몰조항 삭제가 필요하나, 당초 주기적 예보료율 점검 취지를 고려하여 ②일몰조항 기한 연장도 바람직**

◆ **민관합동TF 구성**

- **정책당국(2)**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팀장), 예보 기금관리단장(간사)
- **금융업권(5)** : 금융협회별 기획담당 임원(은행, 금투, 생보, 손보, 저축은행)
- **민간전문가(6)** : 금융 3명, 연구원 소속 1명, 소비자 1명, 재정 1명

【민관합동TF 회의 현황】

구분	주요 논의 내용
1차 (22.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보험제도 개선 추진 주요내용* 설명 및 논의 * ①추진배경, ②과제(보호한도, 목표규모 및 예보료율 등), ③추진일정 등
2차 (22.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보제도 개선 연구용역 주요사항* 검토내용 * ①보호한도, ②목표규모 산출모형 관련 금융업권 의견
3차 (22.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보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
4차 (23.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제도 도입방안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방안 공적자금 정기재계산에 따른 잔여재산 관련 검토
5차 (23.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연금저축 등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방안
6차 (23.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보호한도·예보료율 등 관련 검토

보호한도 상향 여부

- (민간 전문가) 업권은 한도상향에 부정적이나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고령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자산구성 변화 등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
 - 취약계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며,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필요
 - 최근 미국 사례 등을 보면 한도를 상향해도 뱅크런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보다는 전액보호가 필요할 수 있음
 - 현재 예금분포는 현행 한도에 적용한 결과로 한도 상향 시 분산예치 부담이 완화되는 간접혜택도 추가 고려 해야함
- (금융업권)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98%)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
 - * 보호한도 내 예금자 수 비중 : (5천만원) 98.1% → (1억원) 99.3%(+1.2%p)
 - 또한,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중인 바,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후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한도 상향 시 업계 內 경쟁이 심화되어 오히려 업계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예보료율 적정성 검토

- (민간 전문가) 예보료 등의 대부분(79%)이 과거 구조조정비용에 사용되고 있어 현재 기금 적립이 충분치 못한 상황으로 예보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금확충방안을 최우선 검토할 필요
 - 저축은행업권은 기금 적자 규모가 크고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한 특별계정 상환을 위해 타 업권에서 공동 부담 중인 상황도 고려할 필요
 - 충분한 기금 적립을 위해 예보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인상 부담은 상환기금 잔여재산 분배 외에 목표 도달기간 연장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음
- (금융업권) 목표규모 산출 시 최근 금융환경 변화, 금융업권 건전성 개선, 금융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할 필요
 - 현행 예보료율 유지 및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 부담이 종료되는 '27년 이후 예보료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예보료율 산출 시 상환기금 잔여재산 배분방안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방안과 연계할 필요